

이주대책은 지역의 주택수급과 입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하반기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조선일보, 5.24) >

◆ 年 2만~3만 가구 이주, 일정 뻑뻑...신도시 재건축 괜찮나

- 10년 동안 해마다 2~3만 가구씩 이주수요, 전월세 시장 충격을 흡수하기에 대책이 부실
-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을 2~3년만에 마무리하여 27년 착공 가능할지 의문

□ 이주대책은 지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주민 수요 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하반기 중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.

- 이주대책은 우선 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관리하여 신규공급을 확대하고,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립 될 것입니다.

□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를 통한 사전 준비기간 단축과 함께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협력형 정비모델을 통한 인·허가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선도지구가 '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담당부서	도시정비기획준비단	책임자	단 장	최병길 (044-201-4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현 (044-201-4921)